

# 회고 2006

## 1 서남권 발전계획 발표

# 22조원 투입 국토발전 균형 맞추기

2006년이 저물어 간다. 올 한 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은 헤아려가며 모두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역주민들은 밝은 소식에 내일의 희망을 보았고, 굶은 일에는 가슴을 저렸다. 지난 1년동안 지역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일들을 되돌아 본다.

### 2020년까지 물류거점·세계적 관광지 육성 盧대통령 강력 의지...전남도 사업준비 박차

지난 11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는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발전이 크게 뒤떨어졌던 국토 서남권의 획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 해당 부처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관련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무안~목포~신안~영암~해남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무안국제공항과 무안~광주고속도로, 목포신항 등 인프라 구축과 무안기업도시, 해남·영암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을 통해 지역의 면모를 일신한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은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농업기반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기지 조성 ▲세계적 복합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참여정부 출범 직후 서남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목포~해남지역을 묶고 싱가포르 거대자본을 유치해 물류·산업·관광단지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

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른바 '행담도 사건'에 발목을 잡혀 S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고,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해남·영암의 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남권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올 8월 또다른 개발계획인 '서남해안권 발전구상'(무안·목포 성장계획)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른바 '행담도 사건'에 발목을 잡혀 S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고,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해남·영암의 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남권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올 8월 또다른 개발계획인 '서남해안권 발전구상'(무안·목포 성장계획)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개발계획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됐던 해남·영암일대 간척지 확보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무안을 방문해 ▲J프로젝트 부지 확보 지원 ▲기업도시 투자기업에 획기적인 혜택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비 지원 ▲목포~대불산 단상학대교 조기 완공 ▲목포 신항만 12선석 규모 유지 등 서남권 개발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실천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의 약속 이후 전남도는 J프로젝트 선도사업인 '2010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또 전남도는 국무총리실에 만들어 어질 가칭 '서남권발전 추진단'개설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사업구체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소외와 빈곤, 불균형 발전 피해자의 대명사였던 전남 서남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은 올해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무안을 방문, 서남해안 발전계획에 대한 범 정부적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유급 인턴보좌관 도입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13일 오후 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의원 유급화 1년도 안돼...명분 없다" "효율적 견제·감시 위해 도입 꼭 필요"

시의회 '인턴보좌관제' 토론회  
광주시의회의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13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또 다시 의원들의 분회의 입장 지지 투쟁을 벌일 방침이어서 14일 분회의가 주목된다. 하지만 유재신 광주시의회원은 "한 해에 3조3천억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손이 부족하다"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시스템적 측면에서 나아가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적) 보좌관들의 인권과 생존권적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호권 의원은 "유급보좌관제는 의원들의 이기심 차원이 아니라 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좌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건설(주)과 현대스틸산업(주)이 울촌산단에 1천억 원을 투자, 대규모 철구조물 제작공장을 건립한다. 13일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은 울촌 제1산업단지에 모두 1천억 원을 투자, 해상강교와 조선용 블록 등 철구조물 제작 공장을 건립키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경제구역청 상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백육인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

### 현대건설·현대스틸산업-전남도 투자협약 울촌산단에 1천억 투자 철구조물공장

스틸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울촌 제1산단에 220억 원을 투자해 부지 10만 평을 매입, 현대스틸산업에 제공하고 현대스틸산업은 78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08년 7월까지 구조물 공장 건축 및 설비시설을 갖춰나

어섬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공장용지를 유상 제공하고 공장건립과 운영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투자협약은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현대스틸산업 및 회사인 현대건설 관계자와 수차례 상담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현대스틸산업은 공장부지로 국내 3~5개 후보지를 놓고 저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전남도 '서남권 발전' 태스크포스팀 구성

전남도가 13일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구체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도는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한

## 우리집 주소가 새주소로 바뀝니다.

### 2007년 4월 5일부터 지면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사용되어 오던 지면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주소로,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 도로명주소, 이렇게 편리합니다.

- 1.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 2.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